

# 한국에서 바라본 북한 리스크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tokmeju@gmail.com

## I. 2017년 현재 북한 리스크의 현상 평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한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엄중하게 고려된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며, 둘째는 북한정권 붕괴 시 재정부담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북한과 관련한 리스크이므로 한국경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곧바로 ‘북한 리스크’로 등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둘째 항목, 즉 ‘북한 정권 붕괴 시 재정부담’은 현재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는 2009~12년 사이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권력 승계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일단락되며, 같은 해 하반기 무디스, 피치, S&P의 3대 국제 신용 평가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는 ‘북한의 원만한 권력 승계와 그에 따른 붕괴 가능성 감소’였다.

2017년 현재 화두로 등장해 있는 것은 첫째 항목인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빌리면, 현 상황은 ‘6·25 전쟁 이후 최고 위기,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과 관련한 전통적 주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소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전쟁이나 심각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sup>1)</sup>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발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국의 신용 등급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1) 『조선일보』, 「S&P, ‘북한 리스크, 한국 신용등급 영향 줄 정도 아냐」, 2017. 9. 14.

평가이다.

이 같은 상황 평가는 단기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할 수도 있다. 아직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대세를 바꿀 수도 있을 추세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소폭탄 능력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구비하는 데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략목표를 고도화하고 보다 위협스럽고 대담한 방법과 수단을 점차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와 달리 북한 리스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은 제대로 준비를 갖춘다면, 위험수준의 증가를 미래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현명한 판단능력과 충분한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 II. 북한 리스크의 기원과 성격의 변화

북한 리스크는 6·25 전쟁이 어느 한 쪽도 우세를 점하지 못한 교착상태에서 휴전되었다는 데서 기원한다. 첫째, 전쟁을 유발한 갈등요인이 해결되지 않고 미봉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간 갈등이 중단되지 않았다. 둘째, 처참한 전쟁 경험을 배경으로 남북관계의 기초가 닳았기 때문에 이후 남북 간 갈등은 매우 밀도 높은 정치적 적대성과 군사적 대결에 기반하게 되었다. 셋째, 이후 남북한은 군사 갈등을 중축으로 적대적 경쟁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적대적 경쟁관계에서는 양자 간 세력균형에서 우리 측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화와 제압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갈등이 반복되며, 그 가운데 상호 간 의심과 대결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냉전이 종결되었을 때, 북한은 갑작스레 매우 비관적인 현실과 전망에 직면했다. 우선, 냉전의 동맹구조라는 보호막도 없어진 상태에서 남북균형이 한국에 현저하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북한에게 더 나빴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었다. 북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존재했다. 첫째,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패배를 수용하는 것과, 둘째, 패배의 판을 승리의 판으로 바꿀 수도 있을 매우 위협스럽고 강력한 도발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 북한은 기본적으로 위의 두 번째 정책 선택을 기반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서 북한의 핵심 정책 지렛대는 핵개발의 본격적 추진이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북한은 위험-회피적이며 기만적 핵정책을 추구했다. 먼저 북한은 핵 위기 유발이라는 모험적 시도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직접 협상 상대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응하면서 시간을 벌고 협상성과를 취하는 한편,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증강을 위한 비밀스러운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추구했다. 북한의 대내외적 취약성 그리고 핵 능력의 원시성 때문이었다.

두 번째 단계로 2009년 이래 북한은 위험-감수적 핵정책을 선택했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공개적이고 도발적으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발전 속도를 가속하면서 그에 대한 외부의 강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정면 대결하고 있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이러한 공개적이고 도발적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2008년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남북관계의 적대적 전환, 비밀스러운 기만적 핵정책 추진의 지속 불가,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권력 세습 및 경제위기였다. 북한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강력한 도발을 활용하여 대내외 환경 악화를 승리 국면으로 역전시키고자 하는 위험스러운 선택을 했다. 이러한 시도의 성패 여부는 특히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있어서 생사 여부의 문제였다.

둘째, 북한 핵능력의 증가다. 플루토늄 기반 핵개발 단계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정밀타격에 매우 취약했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를 내걸고 비밀스럽게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정밀타격의 위험을 회피했다. 그러나 2009년경에 이르면서 북한은 농축우라늄 핵개발 경로 확보 및 핵무기 보유 수량의 증가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루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주변국이 기습 군사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이중의 안전판이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 증강정책을 공개적이고 도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북한이 과거에 비해 보다 과감한 대외도발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주변국가들이 치명적 반격을 가할 개연성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 III. 북한 리스크의 향후 전망

북한 핵능력의 증가는 북한의 대외전략 목표, 그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과 수단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 변화는 북한이 공개적이고 도발적으로 핵능력 증강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등장했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현저히 분명해지고 있다. 2017년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완성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예방타격을 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치명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재래식 전면전의 위험 뿐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구비한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압박에서 보다 과감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하더라도 핵무기 사용을 방패로 내세우면 상대방에 의해 치명적으로 보복당할 개연성이 낮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보다 강화되고 위협스러우며 보다 빈번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유발하는 북한 리스크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북한 리스크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 과거에는 휴전이 정상상태였고, 북한의 도발은 예외적인 사항이자 단기적이고 충격도 미약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정책과 대내 제도체계 및 사회적 심리상태는 이러한 수준의 북한 안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핵 억제력을 보유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전쟁 직전의 위협스러운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 측의 오판과 오산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치명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까지 오랜 동안 B급 태풍 수준의 리스크를 경험하고 예상하면서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 왔다. 우리는 오랜 동안의 관성에 따라 앞으로도 B급 태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할 것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슈퍼 A급 태풍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하자. 물론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슈퍼 A급 태풍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B급 태풍뿐만 아니라 슈퍼 A급 태풍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슈퍼 A급 태풍이 불어와도 북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방심한 결과 불필요한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복핵능력 증강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시키고 있는 보다 위협스러울 수 있는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성과 면역체계를 새롭게 준비하고 완성해야 한다. 적어도 한국의 국방정책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준비를 불충분하긴 하지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기업과 가계와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와 예측 그리고 물리적 준비의 필요성은 아직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대처에서 모범적 사례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이 그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다면, 미래에 북한의 안보도발이 강화되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여전히 '북한의 도발은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조선일보』, 「S&P, ‘북한 리스크, 한국 신용등급 영향 줄 정도 아냐」, 2017. 9. 14.